

“국무총리와 여당 대표의 국정 운영은 권력 찬탈이다”

헌법학자들이 본 담화문

대통령이 권한 넘길 수 있는 것은 사망·탄핵·스스로 물러났을 때 뿐 대통령 ‘국정 일임’ 방식은 위헌

헌법학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 선포에 따른 사과 담화에서 제시한 ‘국정 일임’ 방식은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이 현직을 유지하면서 국무총리와 특정 당에 국정운영을 일임하는 절차는 헌법에 없는 규정이라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 7시간을 앞둔 7일 오전 10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대국민 사과 담화를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담화에서 “임기를 포함해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면서 “향후 국정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헌법학자들은 이는 위헌 소지가 다분한 방식이라고 평가했다.

우선 헌법상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이 권한을 넘길 수 있는 방식은 유고(有故) 시와 탄핵시 뿐이다.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권한 대행은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71조)이다.

대통령 궐위는 대통령이 사망, 탄핵, 사임 등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을 말한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국가운영 공백을 막기 위해 헌법은 권한대행을 규정하고 있다.

한상희 건국대 법률전문대학원 헌법교수는 “대통령이 언급한 ‘우리 당’은 사적인 모임에 불과하다”면서 “대통령의 담화에 담긴 내용은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고 그것을 사유화한 것으로 민간인에게 국정운영을 넘기겠다고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구체적으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정당의 대표일 뿐이어서 국가권력을 행사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결국 한 대표에게 국정운영을 넘기면 불법 권력이양에 해당하는 셈이다.

한 교수는 “한덕수 국무총리도 대통령의 권한을 위임 받으면 권한대행으로서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면서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총리의 공동담화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헌법에도 없는 국정운영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무총리와 여당의 대표가 국정운영을 하는 것은 권력 찬탈에 해당한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당시 국회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언급했다”면서 “윤 대통령이 담화에서 여당에게 국정운영을 일임한 것은 국회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한 총리와 한 대표에게 국정운영을 위임하는 것은 민주적 정당성은 물론 법적 정당성도 없다”고 분석했다.

민병로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헌법교수도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절차만으로 질서있는 대통령 퇴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국정 수습 방안을 담은 공동 담화문을 발표하기 위해 회견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대국민 공동 담화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이 궐위되면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68조 2항)를 치르면 된다는 것이다.

민 교수는 “대통령이 현직을 유지하고 국무총리가 권한을 행사하면 수렴청정과 다를 바 없다”면서 “국무총리가 현직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재가를 받아야 한다. 이는 대통령이 권좌에서 물러나지 않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민 교수는 “헌법은 대통령이 사망 또는 스스로 물러났을 때, 탄핵됐을 경우에만 절차와 규정을 두고 있다”면서 “당연히 대통령 궐위시 국무총리가 권한 대행이지만, 이번 사태에서 국무총리가 내란 방조 혐의가 있다면 정부조직법 상 국무위원 서열에 따라 권한을 승계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헌법법상 국무위원 서열은 국무총리에 이어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등의 순이다.

또 권한 대행의 경우 명확한 업무범위는 규정돼 있지 않지만, 국가 운영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한된 권한만 행사 가능하다는 것이 법학자들의 중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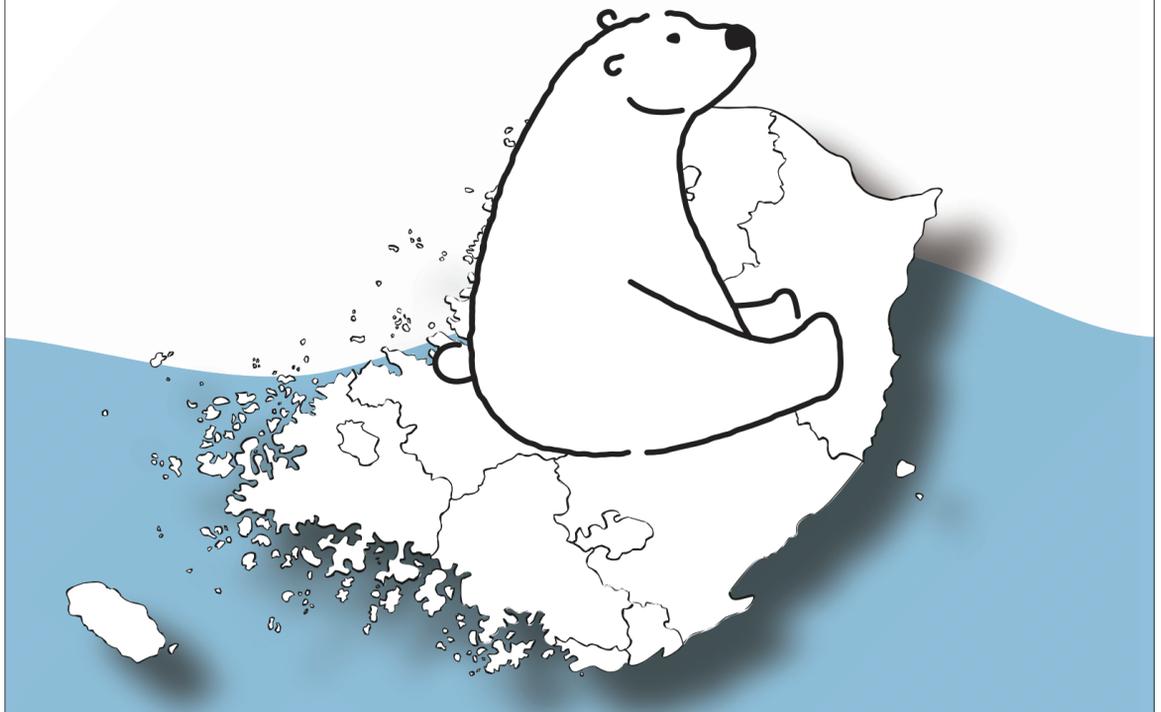
행정 업무와 정책 집행 뿐 아니라 긴급사태 대응 및 외교업무는 가능하다. 국회와 협력 및 법안 처리도 할 수 있다. 단, 헌법개정 발의는 불가하고, 대규모 정책 전환이나 중대 인사조치는 할 수 없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이 작품은 2024 지역사회 MZ세대 공익광고 공모전 수상작입니다.



사라져가는 건 북극뿐만이 아닙니다



지역소멸 이제는 관심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 공익광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실시되었습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연합뉴스

미국 언론 “국가보다 정당 선택한 국민의 힘” 일본 언론 “한동훈 발표 실행되기 어려울 것”

외신들 “탄핵 불발에 혼란 가중”

지난 7일 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불발이 향후 정치적 혼란을 가중할 것이라는 외신들의 보도가 이어졌다. ‘국가보다는 정당을 우선시한 결과’, ‘윤 대통령의 행동보다는 진보정권의 복귀 더 우려’ 등 국민의 힘이 상처받은 승리를 거뒀다며 향후 윤 대통령과 국민의 힘 입지가 오히려 더 좁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 정부는 탄핵안 표결 직후 한국의 민주적 제도와 절차가 헌법에 따라 온전하고 제대로 작동할 것을 촉구한 뒤 평화 시위에 대한 권리가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바이든 행정부 당국자는 7일(현지시간) “미국은 오늘 국회의 결과와 국회의 추가 조처에 대한 논의에 주목했다”고 밝혔다. 당국자는 이어 “우리는 한국의 민주적 제도와 절차가 헌법에 따라 온전하고 제대로 작동할 것을 계속해서 촉구한다”며 “우리는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한국의 관련 있는 당사자들과 접촉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평화롭게 시위를 권리는 건강한 민주주의의 필수적인 요소이며 모든 상황에서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 6일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통화에서 계엄령 해제를 환영하며 “한국의 민주적 절차가 승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한 바 있다. 동맹인 한국으로부터 계엄 선포를 사전 공유받지 못한 미국은 계엄을 두고 ‘심한 오판’, ‘불법적’ 등 높은 수위의 표현으로 반대 입장을 밝

혀 왔다.

시카고 글로벌 문제 협의회의 아시아 연구 전문가 칼 프리드호프는 같은 날 월스트리트저널(WSJ)에 “탄핵을 막은 것은 한국 보수 정당과 윤 대통령에게 ‘피로스의 승리(너무 많은 희생을 치르고 얻은 승리)’일 수 있다”며 “윤 대통령은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국민의힘이 국가보다 당을 선택한 최악의 결과”라고 비판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워싱턴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 중 하나인 한국에 장기적인 정치 불확실성이 이어질 수 있는 판이 깔렸다”고 평가했다. 워싱턴포스트(WP)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 대통령을 지지하기 위해 결집했는데, 윤 대통령의 행동보다는 진보정권의 복귀를 더 우려한 듯 하다”고 분석했다. CNN은 “여당이 대중의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할 것 같다”며 역풍을 예상하기도 했다.

일본 주요 언론은 8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 무산는 1면 머릿기사로 비중 있게 전하면서 향후 여파에 주목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사설에서 사태 수습까지는 갈 길이 멀고 향후 전개 상황은 예측을 불허한다면서 “혼란이 더 확산하는 것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사히신문은 1면 기사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8일 오전 발표에 대해 “실행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고 평가했다. 이 신문은 별도 기사에서 여당의 표결 불참에 대해 “국민의 비난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도 진단했다.